

2019, 지방직 7급 행정학(B책형)

총 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학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법령을 묻는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되었지만 예년의 7급 문제와 비교할 경우 대체적으로 평이한 출제로 보입니다.

먼저, '문제 6번' 정책수단에 대한 문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였으나, 살라몬은 정부조치의 도구를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으로 재분류하면서 공적 보험을 간접 수단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위 문제는 새행정학(이종수의, 대영문화사 간), 정책학원론(노화준 저, 박영사 간)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 2번'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문제 15번'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문제 18번'은 「전자정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행정학 이론심화 강의'나 '행정학의 핵 강의'에서 강조한 부분들이 정답으로 출제된 문제라 답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정답이 되지 않는 지문들이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렵게 느낀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7급 시험문제의 경향은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과거 기출 지문의 반복적 출제보다는 새로운 지문들로 출제되고 있으며,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요구되는 지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출제된 기출지문의 단순 암기식 학습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기 어려우며, '하이패스 행정학 심화 강의' 등을 통해 이해 중심으로 차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수험생들에게 유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출제영역

행정학총론	행정환류론	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지방행정론
7	1	3	1	3	3	2

* 출제경향

기본 개념	이론 이해	제도 이해	법령 문제	기타(학자, 연역, 사례 등)
2	12	1	5	0

01

로위(Lowi)의 정책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 ①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②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③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정답 ①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방법(직접적, 간접적)과 강제력의 적용영역(개별적 행위, 행위의 환경)에 따라 정책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재분배정책으로 보았다. **(하이패스 행정학 p250)**

핵심체크 로위(Lowi)의 정책유형론

강제력 적용영역 강제력 행사방법	개별적 행위(개인의 행위)	행위의 환경
직접적(근접)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간접적(원격)	분배정책	구성정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 •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집행과정) 및 정책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적 관계가 달라진다고 봄 • 규제정책은 다원주의 정치의 모습이, 재분배정책은 엘리트주의 정치의 모습이, 분배정책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은밀한 결탁(로그롤링)이 이루어진다고 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주의적 시각과 엘리트주의적 시각의 통합 • 상호배타성 조건 불충족 : 분배정책과 규제정책은 정부활동을, 재분배정책은 정부활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실의 특정 정책이 중복분류 됨 • 포괄성 미흡 : 로위의 분류에 포함할 수 없는 정책도 현실에서 존재함 • 정책의 조작적 정의 곤란 : 연역적 추론에 의한 분류라는 점, 정책분류에서 사용한 기본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조작적 정의(객관적·경험적 기술) 곤란 	

03

다음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 체제를 선호한다.
- ㄴ.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
- ㄷ.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 ㄹ.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 ㅁ. 집권적 계층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정답 ②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신관리주의(경영관리기법의 행정예의 도입)와 시장주의(신자유주의 : 정부기능의 시장으로 이전)에 입각한 공공관리를 지향하는 개혁의 흐름을 말한다. 신공공관리론은 행정관리의 이념으로 효율성을 지향하고(ㄷ),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체제를 선호하며(ㄱ), 사후대처가 아닌 예측과 예방을 통한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ㄴ). **(하이패스 행정학 p96)**

오답정리

- ㄷ. 신공공관리론은 투입이 아닌 성과(결과) 중심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한다.
- ㅁ. 신공공관리론은 계층제적 책임성이 아닌 참여적 대응성 확보를 강조한다.

핵심체크 | 전통적 관료제 정부와 신공공관리론의 비교

기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 (행정 : government)	신공공관리론 (NPM : governance)
정부의 역할	노젓기(rowing)	방향 잡기(steering)
정부의 활동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행정의 가치	형평성 · 민주성	경제성 · 효율성 · 효과성
서비스	독점적 공급	경쟁 도입 : 민영화 · 민간위탁
공급 방식	행정 메커니즘(조직 중심)	시장 메커니즘(시장 중심)
행정관리기제	법령 · 규칙 중심 관리	임무(사명)중심 관리
행정관리방식	투입 중심 예산	성과 연계 예산
	지출(소비) 지향	수익(수입) 창출
	사후대처(단기적 · 반응적)	사전예방(예견적 · 예방적)
	집권화 : 명령과 통제	분권화 : 참여와 팀워크 및 네트워크관리
주체 및 책임성	관료 및 행정기관의 편의	고객의 편의
	계층제적 책임 확보	참여적 대응성 확보

04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직군분류를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 ② 인사혁신처장은 필요에 따라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임용권자는 지역인재의 임용을 위한 수습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정답 ③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반면,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하이패스 행정학 p643)

핵심체크 공무원의 징계

경징계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감봉	1~3개월의 기간 동안 보수 1/3을 감함(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중징계	정직	1~3개월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3급으로,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함(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 간 승진·승급 제한) - 전문경력관과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하지 아니함
	해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이내에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급에 영향이 없음(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수당은 1/4를 감하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8를, 5년 이상인 사람은 1/4를 감함)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 이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 ~ 1/2을 감함(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퇴직수당은 1/2를 감하고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1/4를, 5년 이상인 사람은 1/2를 감함)

05

신제도주의의 주요 분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정답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 국가마다 형성되는 제도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일반화된 이론의 개발은 불가능하며,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치적 결과를 어떻게 연계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하이패스 행정학 p118~126)

오답정리

-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경제학적 가정에 기반하여 개인의 선호는 이기적(합리적)이며, 제도와는 무관하게 선형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의존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하여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 ④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을 제도로 본다.

06

정책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딩(Vedung)은 정책 도구를 규제적 도구(sticks), 유인적 도구(carrots), 정보적 도구(sermons) 등으로 유형화한다.
- ② 권위(authority)에 기반을 둔 정책수단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 ③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히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다.

정답 ④ 비딩(Vedung)은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해 정책수단을 규제, 유인, 정보제공으로 유형화하였으나, 살라몬(Salamon)은 정책수단이 제공하는 산출물(행정활동: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보호와 금지, 재정지원과 재정부담 등)과 그것을 전달하는 주체(전달 체계: 정부, 시장, 시민사회 등)를 기준으로 13개의 정책 도구를 제시하였다. 살라몬(Salamon)에 따르면 공적 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였으나, 정부조치의 도구를 직접 수단과 간접 수단으로 재분류하면서 보험을 간접 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 문제는 새행정학(이종수외, 대영문화사 간), 정책학원론(노화준 저, 박영사 간) 등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245)

핵심체크 정책수단의 분류

직접성에 따른 분류	의의	행정활동을 정부가 직접 하는지, 제3자 또는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준	
	직접성	낮음	손해책임법, 보조금, 대출보증, 정부출자기업, 바우처
		중간	조세지출, 계약, 사회적 규제, 벌금
높음		보험, 직접 대출, 경제적 규제, 정보제공, 공기업, 정부소비	
강제성에 따른 분류	의의	행정활동이 정책대상자에게 강제성이 있는지, 자발적 협력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기준	
	강제성	낮음	손해책임법, 정보제공, 조세지출
		중간	바우처, 보험, 보조금, 공기업, 대출보증, 벌금, 직접대출, 계약
높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성은 높지만 강제성이 낮은 정책수단 : 정보제공 • 직접성은 낮지만 강제성은 높은 정책수단 : 사회적 규제 •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경우에는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적절 		

07

다음 중 예산 원칙의 예외를 옳게 짝 지은 것은?

- | | | |
|---|--------|--------|
| | 한정성 원칙 | 단일성 원칙 |
| ① | 목적세 | 특별회계 |
| ② | 예비비 | 목적세 |
| ③ | 이용과 전용 | 수입대체경비 |
| ④ | 계속비 | 기금 |

정답 ④ 한정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 준 목적범위 내, 규모범위 내, 시간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목적(질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 이용과 전용, 규모(양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시간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로 이월과 계속비 등이 있다. 단일성의 원칙이란 예산은 하나의 장부에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로는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등이 있다. (하이패스 행정학 p660)

핵심체크 전통적 예산원칙과 그 예외

사전의결의 원칙	개념	예산은 행정부가 집행하기 이전에 입법부에 의해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절차성의 원칙)
	예외	준예산, 사고이월, 전용, 이체, 예비비,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단체장의 선결처분 등
엄밀성의 원칙	개념	예산과 결산은 되도록 일치되어야 한다는 원칙(세입추계가 정확해야 하고, 불용액이나 불법사용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 - 정확성의 원칙)
	예외	예산의 신축성 확보 장치들
완전성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개념	예산에 모든 세입과 세출이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빠짐없이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포괄성의 원칙)
	예외	순계예산, 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의 현물출자, 전대(轉貸)차관 등
공개성의 원칙	개념	예산과 결산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외	우리나라 일부 국방비·외교활동비·정보비, 신임예산 등
단일성의 원칙	개념	예산은 하나의 장부에 전부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외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등
명확(료)성의 원칙	개념	예산은 예산구조와 과목이 단순하고 명확하여 국민과 국회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원칙(예산공개의 전제조건)
	예외	총액계상예산(총괄예산),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 등
통일성의 원칙	개념	예산은 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연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정부의 모든 수입은 국고로 편입되고 여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 국고통일의 원칙·비영향의 원칙·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예외	특별회계, 기금, 수입대체경비, 수익금마련지출제도, 목적세(국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한정성의 원칙	개념	예산은 국회가 의결해 준 목적범위 내, 규모범위 내, 시간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질적) 한정성 예외 : 이용, 전용 • 규모(양적) 한정성 예외 :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 시간(기간) 한정성 예외 : 이월, 계속비, 과년도 수입과 지출, 조상충용

08

합리성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Simon)의 실질적(substantive) 합리성은 행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 ③ 기술적 합리성은 일정한 수단이 목표를 얼마만큼 잘 달성시키는가, 즉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 ④ 사이먼(Simon)은 인간이 실질적 합리성을 사실상 포기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려는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디징(Diesing)은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142)

핵심체크 합리성의 유형

학자	종류	내용
사이먼 (H. A. Simon)의 합리성	내용적 합리성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행위(실질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의식적인 사유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수단을 찾는 것(Simon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이유로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
베버 (M. Weber)의 합리성	이론적 합리성	현실의 경험에 대한 지적 이해나 인과관계를 규명해가는 합리성
	실제적 합리성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실용적·이기적 판단을 할 때 나타나는 합리성(현실적·실천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최적의 포괄적인 주관적 가치를 찾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과 규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합리성(Weber는 관료제를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인식)
디징 (P. Diesing)의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목표성취에 적합한 수단을 찾는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비용·효과의 비교개념에서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사회체제의 구성요소 간의 조화 있는 통합성을 추구하는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정책결정구조가 개선될 때 나타나는 합리성
	법적 합리성	인간과 인간 간에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할 때에 나타나는 합리성

09

행정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мок(Dimock)은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한 기계적 효율관을 비판하며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했다.
- ② 프레데릭슨(Frederickson)과 왈도(Waldo) 등 신행정학의 학자들은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가치로 주목받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③ 롤즈(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는 다시 차등 원리와 기회 균등의 원리로 나뉜다.
-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실체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정답 ④ 슈버트(Schubert)는 공익과정설의 입장에서 공익이 민주적 정부 이론의 중심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익실체설은 비민주적인 공익관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이패스 행정학 p132)

핵심체크 공익실체설과 공익과정설

공익 실체설 (적극설, 규 범설)	의의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하여 선형적·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규범적·도덕적 실체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규범적·보편적 실체 : 정의, 형평, 자연법 등 개별특수이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회전체로서의 공동선(사회의 보편적 이익) 또는 국가이익을 공익으로 인식하는 입장 • 사익집합 이상의 공익 : 공공재 공급, 공유지의 비극 극복을 위한 규칙, 기본권 등 단순한 사익의 합으로 볼 수 없는 공공이익을 공익으로 인식하는 입장 • 전체효용극대화설(공리주의, 후생경제학) : 몇몇 개별 사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된다면 공익이 증대된 것으로 보는 입장 • 공동체실체설(신비주의적 형이상학적 공동체론) : 공동체를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고 그 시대의 통치자에 의해 결정된 공동체 스스로의 의지와 욕구를 공익으로 인식하는 입장
	특징	① 규범적·선형적 공익관, ② 공익우선주의적 관점(전체주의적·집단주의적 입장), ③ 국가주의적 관점(국민의 덕성을 함양하는 목민적 관점), ④ 엘리트론적 공익관과 합리모형, ⑤ 사법부 판례의 기준(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⑥ 관료가 공익결정에 적극적인 역할 수행(적극설)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주의의 이론적 근거(개인의 인권 유린) • 비민주적 공익관(소수 엘리트의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전환) • 공익개념의 추상성 및 이념적 경직성(신축성과 융통성 부족)
공익 과정설 (소극설, 민주적 공익이론)	의의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
	근거	다원주의(이익집단론적 과정설)
	특징	① 현실적(경험적)·절차적(과정적) 공익관, ② 정책과정의 합리화 중시(강한 이익집단에 의해 희생되기 쉬운 약자·대중·미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 대표관료제 도입 강조), ③ 민주적 공익관과 점증모형(자유주의·개인주의·국민주권주의에 근거), ④ 관료가 공익결정에 소극적 역할(소극설)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곤란 •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으로 잠재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 반영 곤란 • 민주적인 토의, 협상, 경쟁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에 적용 곤란

10

미국 행정의 발달과정과 행정학의 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약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의 후퇴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지배했다.
-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애플비(Appleby)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적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1906년에 설립된 뉴욕시정조사연구소(The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는 좋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능률과 절약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적 관리론을 행정에 도입하는데 기여하였다.(하이패스 행정학 p66)

오답정리

- ① 잭슨(Jackson)이 도입한 엽관주의는 정치지도자의 행정통솔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및 정책수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촉진하였다.
- ② 건국 직후 미국 정치체제는 민주성을 지향하는 지방분권이 지배적이었으며, 이에 반발하여 중앙집권을 전제로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가 대두되었다.
- ④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초석을 다진 윌슨(W. Wilson)은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적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11

실적주의(meri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주의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②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의 한계이다.
- ③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④ 실적주의에서 공무원은 자의적인 제재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

정답 ① 실적주의는 업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해 초당파적이고 독립적인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인사행정을 통일적·집권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하이패스 행정학 p551)

핵심체크 실적주의

개념	공직임용의 기준을 개인의 실적(개인의 능력, 자격, 지식, 성적 등)에 두는 제도
발전요인	① 정당정치 및 업관주의의 폐해(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사건) ② 행정국가화 현상, ③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등
성립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 노스코트-트레빌리언 보고서에 근거한 제1, 2차 추밀원령(1870)에 의해 확립 • 미국 : 영국의 공무원제도를 연구한 이스턴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 펜들턴법(1883)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헤치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에 의해 강화됨
펜들턴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 ② 독립적·초당적 연방중앙인사위원회 설치, ③ 시보임용 기간제, ④ 공무원의 정치 헌금 및 정치활동의 금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⑤ 전문과목 위주의 시험과목 편성, ⑥ 정부와 민간부문 간 폭넓은 인사교류, ⑦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 등
주요내용	① 공직취임의 기회균등, ② 능력·자격·실적 중심의 공직임용, ③ 정치적 중립, ④ 공무원의 신분보장, ⑤ 인사권의 집권화, ⑥ 인사행정의 합리화·과학화·객관화, ⑦ 상대적 평등주의(능력에 따른 차별)
장점	①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민주적 평등이념 실현), ②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확보, ③ 행정의 공정성 확보(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④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확보, ⑤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등
단점	① 인사행정의 경직화·형식화, ② 인사행정의 소극화(부적격자의 제거에 관심), ③ 인사행정의 집권화, ④ 형식적 기회균등(형평성·대표성 저하), ⑤ 행정의 대응성·책임성 저해(신분보장으로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야기), ⑥ 정치적 변동 대응 곤란, ⑦ 직무수행 능력 측정 곤란, ⑧ 기술성·수단성 위주의 행정 야기 등

12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욕구가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를 만족 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성과보다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정답 ② 엘더퍼(Alderfer)의 ERG 이론은 상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를 더욱 충족시키고자 하는 좌절-퇴행모형을 주장한다.(하이패스 행정학 p501~511)

오답정리

-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론은 상위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하위욕구가 발로되는 '욕구의 하향적 퇴행현상'을 고려하지 못한다.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 이원론은 '감독자와 부하의 관계(대인관계)'를 위생요인(불만족요인) 중 하나로 제시한다.
- ④ 포터와 롤러(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 이론은 내용이론은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온다고 보는 내용이론과 달리 직무성취(업적, 성과)의 수준이 직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13

다음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ㄴ. 검사
 ㄷ.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ㄹ. 도지사의 비서
 ㄹ. 국가정보원의 직원

-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④ 특정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검사(ㄴ),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ㄷ), 국가정보원의 직원(ㄹ)은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ㄱ)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도지사의 비서(ㄹ)는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575~577)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경력직 공무원	의의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직업공무원	
	일반직	의의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성	① 행정·기술직, ② 우정직, ③ 연구·지도직, ④ 전문경력관
	특정직	의의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구성		① 법관·검사, ② 의무공무원, ③ 경찰공무원(자치경찰 포함), ④ 소방공무원(지방소방사 포함), ⑤ 교육공무원(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포함), ⑥ 군인·군무원, 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⑧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⑨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의의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력직 외의 비직업공무원	
	정무직	의의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직 :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 임명시 국회 동의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 또는 보조 : 장·차관, 청장, 처장,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 위원장, 국가인권위 위원장 등
	별정직	의의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구성		① 비서관·비서, ② 장관정책보좌관·차관보, ③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지방의회 전문위원 등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영국의 의회형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대립형의 특수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기관대립형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답 ④ 기관통합형의 집행기관은 전문성이 약한 지방의회에 종속되어 행정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이패스 행정학 p801)

오답정리

- ① 우리나라는 시장의 권한이 지방의회의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강시장-약의회형의 기관대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영국의 의회형은 주민의 선거로 지방의회만을 구성하고, 지방의회가 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여 구체적인 집행을 수행하는 형태로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 ③ 미국의 위원회형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선출된 위원 중 1인이 시장으로 지명되며 다른 위원들 역시 그 시의 행정부서를 나누어 맡아 행정을 수행하는 형태로 기관통합형에 해당한다.

핵심체크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비교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형)	기관대립형(대통령중심제형)
의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시키는 형태(권력통합주의)	의결기능은 의회에, 집행기능은 집행기관에 분리시키는 형태(권력분립주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주민자치형 국가에서 채택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 장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단체자치형 국가에서 채택 • 집행기관 직선형, 집행기관 간선형, 집행기관 임명형 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의 권한이 모두 지방의회에 집중되어 책임 행정 구현 용이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갈등과 대립이 적어 지방행정의 안정성 확보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단일화로 결정과 집행의 유기성 확보 및 지방행정의 신속성·능률성 제고 • 의회의 신중한 심의에 의한 정책결정으로 공정한 자치행정 가능 •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 소규모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통한 민주정치 • 전문적인 행정기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향상 • 단일 지도자가 존재하여 행정책임 소재 분명 • 행정부서 간 분과주의 배제 극복을 통한 행정의 종합성 제고 • 집행기관 직선형의 경우 주민통제가 용이하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며, 국민의 대응성 증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제와 균형이 곤란하므로 민주정치 훼손 가능성 • 전문성이 약한 지방의회에 행정이 종속되어 행정의 전문성 저해 • 단일의 지도자가 없어 책임소재 불분명 • 행정부서 간 분과주의로 인한 행정의 종합성·통일성 약화 •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 공무원의 재량범위 협소 •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대표성 확보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갈등과 대립으로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 저해 •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로 책임행정 저해 • 단일의 지도자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집중되어 신중한 의사결정 저해 • 집행기관 직선형의 경우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정책 양산
우리나라	일본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기관분립형(강시장-약의회형)	

15

공직자윤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립대학교의 학장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 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재산공개 대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액은 5천만 원이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변동을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②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이다. (하이패스 행정학 p212)

오답정리

- ① 국립대학교의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은 재산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 ③ 공개대상자 등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 ④ 퇴직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체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 국가 및 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재산을 공개해야 함(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비리의 소지가 높은 7급 이상 5급 이하 공무원도 포함)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신고 : 공직자와 그 가족은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하며,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로 귀속됨(신고할 선물가액은 미국화폐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 이해충돌방지 의무 : 국가 및 자치단체의 의무이자 공무원의 의무 •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하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

16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으면 파생적인 업무도 줄이려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가진다.
- ② 업무의 강도나 양과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 ③ 공무원은 업무의 양이 증가하면 비슷한 직급의 동료보다 부하 직원을 충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④ 브레넌과 뷰캐넌(Brennan & Buchanan)의 리바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처럼, 관료제가 '제국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①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파킨슨의 법칙에 의하면 관료는 본질적인 업무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파생적인 업무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무사안일의 경향을 지닌다. (하이패스 행정학 p42)

핵심체크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법칙 • 파킨슨은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공무원 수의 증가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매년 평균 5.75%의 비율로 증가)
내용	제1공리(부하배증의 법칙)와 제2공리(업무배증의 법칙)의 상호작용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시 공무원 수 증가 현상 설명 곤란 • 감축관리로 인한 공무원 수 축소 현상 설명 곤란

1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③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하이패스 행정학 p757)

핵심체크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의	예산편성과정에 국민(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국민(주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거버넌스의 제도적 장치, 사전적 참여제도)
배경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가 최초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법」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의무적 시행)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음 ③ 단체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함 ④ 행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8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전자정부의 발전과 촉진을 위해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정부법」 제5조의 2). (하이패스 행정학 p179)

핵심체크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전자정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자정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5년마다 이를 종합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 행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정부업무, 데이터, 응용서비스 요소, 정보기술, 보안 등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연계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9

㉠, ㉡에 해당하는 권력모형을 옳게 짝 지은 것은?

- (㉠)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 (㉡)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 | | | |
|---|-----------|-------------------|
| | ㉠ | ㉡ |
| ① | 밀즈의 지위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② | 밀즈의 지위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 ③ | 헌터의 명성접근법 | 달의 다원주의론 |
| ④ | 헌터의 명성접근법 |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무의사결정론 |

정답 ③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전국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수 엘리트가 강한 응집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대중들은 비판 없이 이를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달의 다원주의론)은 정치권력에 두 얼굴(two faces of power)이 있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권력의 어두운 측면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다. (하이패스 행정학 p265~266)

핵심체크 엘리트론

의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특정 소수로 국한되고, 대중들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들의 의사에 의해 국가정책이 좌우된다고 보는 이론	
유럽	파레토의 2대 8의 법칙, 모스카의 지배계급론, 미첼스의 과두제의 철칙 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즈의 지위접근법 : 전국차원의 엘리트 규명 - 군·산·정 복합체 • 헌터의 명성접근법 : 지역차원의 엘리트 규명 - 사회적 명성가(기업인·변호사 등) 	
내용	사회의 이원화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대중으로 이원화
	엘리트 간 관계	동질적·호혜적이고 폐쇄적인 관계
	정책형성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형성을 지배(계층적·하향적 통치 질서 형성)

핵심체크 달(R. Dahl)의 다원론

연구대상	뉴헤븐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정책결정 사항들을 경험적으로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의 존재 및 정책영역별 엘리트의 분산 • 선거과정을 통한 엘리트 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대중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됨 • 공식적으로는 소수가 정책과정을 좌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정치
결론	어떤 사회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집단이 있으면,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엘리트에 의해 그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므로 모든 사회문제가 거의 무작위적으로 정치체제에 투입됨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리모형은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방식이지만 규범적 성격은 약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은 점증모형의 유용성이다.
- ③ 단절균형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 과정 각 단계에서 예산 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답 ④ 다중합리성모형은 관료들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과정별로 작용하는 다양한 합리성 기준(정치·경제·사회·법적 합리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모형은 정부 예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예산과정의 각 단계에서 예산활동 및 행태를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하이패스 행정학 p698)

오답정리

- ① 합리모형은 예산결정과정을 합리화하여 예산상의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결정방식으로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 ② 예산 결정에서 점증모형은 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나, 합리모형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③ 점증모형을 따르는 예산결정자는 사후후생을 고려하지 않고 최악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단절균형모형은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이 지속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 일정 정도의 변화에 그친다는 점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제시되었다.

핵심체크 예산결정이론

공공선택론적 접근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예산과정을 개인의 선호·의도·선택에 기초하여 설명 • 합리모형에 입각해 있으며, 보수적 방식보다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예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론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 노드하우스의 정치적 경기순환론
다중합리성 모형	의의	‘킹던(Kingdon)의 정책결정모형’과 ‘루빈(Rubin)의 실시간 예산운영모형’을 통합한 모형(정부예산의 과정적 접근방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료들의 의사결정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다양한 합리성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다중적 결정이 이루어짐 • 세입의 흐름(설득의 정치), 세출의 흐름(선택의 정치), 예산균형의 흐름(계약조건외의 정치), 예산집행의 흐름(책임성의 정치), 예산과정의 흐름(누가 예산을 결정하는가의 정치)
모호성 이론	의의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모형인 쓰레기통모형을 예산에 적용한 모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결정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결정에 참여해야 할 참여자, 결정의 기회(선택기회) 등의 요소가 우연히 서로 결합될 때 이루어짐 •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대학조직), 조직의 자원이 풍부한 상태 등의 조건에서만 설명력이 있고 계층제적 질서를 지닌 행정조직에는 적용상 한계가 있음
단절균형모형	의의	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단절현상)가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이 지속된다고 보는 이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을 비판하면서 제시되었음 • 사후적 분석에는 적절하지만,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성 측면에는 한계가 있음